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중증환자에 우선 투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질본, 이달까지 무상공급 물량 확보
치료비용 일인당 280만원 수준
투약기간 5일 원칙, 필요시 연장



코로나19 치료효과 렘데시비르

개발사	길리어드사이언스 (타미플루 개발 미국 제약업체)
개발 목적	에볼라 치료
최초 적용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사용승인
국내 도입	7월 1일 국내 공급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 체결)
약물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 • 환자 회복 기간 단축 • 사망률 감소
투약 환자	조건 4가지 충족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 산소포화도 94% 이하 •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음
투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6병)이 원칙 (필요할 경우 5일 연장, 전체 투약기간 최대 10일)

자료/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된다. 중증환자에 우선 투여되며, 렘데시비르 치료비용은 일인당 28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렘데시비르 우선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투여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번 계약의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el@metroseoul.co.kr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앞장

수소도시 조성·전문기업 1000개 육성

수소경제위원회 1차 회의
340억 규모 수소경제 펀드 조성
연료 등 5대 분야 소·부·장 지원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 설치

정부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2024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 또 10년 이내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기 660기를 확충하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정부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소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는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정의선 수소위원회 의장(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은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340억원 규모 수소경제 펀드도 조성해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수소 생태계 육성 방안도 내놴. 현재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당진, 울산 등 해안선을 따라 U자형으로 분포해있지만, 수소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경상권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화물차와 중장

거리 버스까지 보급 차종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늘린다.

아울러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을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 주택 연료 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 도시에도 관련 인프라를 늘릴 예정이다.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수소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 기준 등을 제정한다. /한용수 기자 hys@

최종구, 체불임금 관련 전격소환

(이스타항공 대표)

현재까지 체불임금 약 250억 추정
고용노동지청 지급명령에도 미이행



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 기자회견에서 최종구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그동안 이스타항공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 해소 방식과 규모에 대해 언급을 피해오던 최종구 대표가 결국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가 2일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 사측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스타항공 사측에 지난 9일까지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임금체불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최종구 대표이사에 2일 소환 조사를 응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급여의 40%만을 지급한 뒤 ‘셋다운’에 돌입하며 현재까지 무급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만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체불임금 관련, 내일이 최종구 대표이사 소환일이다. 내일 소환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제주항공 등 다른 책임자를 언급할 것이고, 또 제주항공 관계자를 부르는 등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 “그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4월 9일 직원 150명의 급여 21억 6000만원에 대해 1차로 진정서를 내고, 지난 2일 148명의 급여 17억 5000만원 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속도조절 나선 與 “공수처, 법정 시한 떠나 야당과 합의”

단독 원구성 진행하며 상황 급변
‘협치 실종’ 정치적 부담감 커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 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험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